

농지전용 늘려 공장 용지난 '숨통'

■ 정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뭉텨냈다

전용허가권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농공단지 건폐율도 70%이하로 상향

정부가 4개월동안 준비해 11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뿐 아니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조성,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과 같은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2단계에 걸쳐 추진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미진한 부분은 물론 입지·자본·기술·인력 등에 있어 47개 핵심과제를 새로 발굴해 기업투자과 직결된 예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관련 규제완화=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장·산·중축, 도로·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파주·문산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한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을 참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오염저감관련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고려해 관리지역과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이로써 관리지역의 경우

제한업체가 79개에서 56개로 줄어든고,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제한도 3천㎡에서 1만㎡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지역내 이미 설립된 건축물에 한해 50% 범위내에서 부지내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참고 등 시설확충도 지원한다.

산단단지 개발 인·허가 소요기간을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2단계(계획·승인)의 인·허가 절차를 1단계로 통합 운영한다.

◇공장용지 입지난 해소=정부는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입지진흥권역을 해제할 때 적용되는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져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입주 예정기업간 양해각서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된 경우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관련법령에 대한 인·허가 담당자들의 자의적이거나 소극적인 해석이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 법령해석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청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도 창업 쉽게=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올해 수도권에 임대산업용지 23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기업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관련 지자체의 적지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소유권을 투자자분별로 공유함에 따라 3자에게 권리사용을 허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환경개선 대책 주요 내용			
항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일정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창업·퇴출	창업기업 취·등록세 완화	2008년 9월30일 개정안 제출
	기술·경영활동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기능의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 도입	2009년 6월30일
	저가용지 공급확대	10년간 3300만㎡(1000만평) 규모의 임대산업단지 공급	2008년 12월31일
	세금부담 완화	2010년부터 20%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2009년 6월30일
토지이용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완화	2008년 9월30일
	농공단지 및 관리지역 내 입주 제한 업종 대폭 축소	농공단지 및 관리지역 내 입주 제한 업종 대폭 축소	2008년 9월30일
규제완화	공정거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2008년 7월31일
	금융규제	금융규제 전반 제로베이스 검토	2008년 9월30일
법 집행절차	기업 불법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 430개 정비등의명령제 도입	2008년 10월30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 설립 ... 청년 창업 5천만원까지 대출 보증

중기청,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앞으로 괜찮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가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가 설립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1천억원, 내년에 3천억원을 보증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장전략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예비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소비자 반응평가 등 시장 타당성 평가에서부터 시제품

제작지원, 투·융자연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립된다.

또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선발, 인건비를 지원해 대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인턴십 수료 후 창업할 경우 무담보 신용으로 창업자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연구소의 직접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한·약에 전문창업보육센터(BI)가 설립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창업투자재원도 확대된다. 중기청은 2조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비율을 올해 24%에서 201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창업기업의 최고경영자도 고용보험의 가입을 허용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연간 3천개 기업이 추가로 창업되고 기존 기업에서도 고용을 늘려 5년간 모두 15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공식 주화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공식 기념주화가 발매됐다. 금화 2종, 은화 4종, 1kg 대형 은화로 구성된 기념주화는 오는 16일부터 수협은행·우체국·국민은행·신한은행을 통해 예약 한정판매된다.

5월 취업자 18만명 증가 그쳐

석달째 10만명대 ... 광주 실업률 전국 최고

5월 취업자 수가 18만1천명 늘어난데 그쳐 3개월째 20만명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수는 2천39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1천명(0.8%) 증가했다. 이런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8월(29만3천명)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무른 뒤 3월 18만4천명으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4월 19만1천명, 5월 18만1천명 등으로 3개월째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만1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8천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5만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4만2천명), 건설업(-3만2천명), 제조업(-1만7천명) 등에서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7만6천명)와 60세 이상(-2만2천명)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5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3.0%였고, 청년 실업률은 6.9%로 0.1%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3.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실업률이 3.8%에 달했으며, ▲서울(3.7%) ▲대전(3.6%) ▲울산(3.6%) ▲부산(3.4%)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기업 임원 선발절차 전면 개편

일부 공모제 문제 많아 ... 관련법 하반기 개정

정부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포기 공기업 '인적쇄신' 작업이 참여정부 인사 등 기록관청의 조직적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이를 둘러싼 신규 세력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 임원 선별제도에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공기업 임원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여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현행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에 대한 공모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 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할 때까지 통상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나 기록관청의 간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공백이 심각한 데다 심사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를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별, 직위별로 임원 선별절차를 차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선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자 통화료 50% 감면

방통위,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대폭 할인

차상위계층 기본·통화료 35% 깎아주기로

방송통신위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요금 비중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동전화요금에 대해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만여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면대상자들에게 SMS(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국민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현재	기본료 면제, 통화료 35%감면	기본료 35%감면, 통화료 35%감면
향후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기본료 35%감면, 통화료 35%감면
예시	현재 월 3만 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현재	기본료 13,000원, 통화료 8,500원	기본료 8,450원, 통화료 7,000원
향후	기본료 0원, 통화료 4,250원	기본료 5,425원, 통화료 4,575원
총액	21,500원	12,025원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 곤란자에 한해 가입비를 면제하고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번호안내 등을 월 이용요금의 30~50%수준에서 감면해왔다"며 "그러나 감면대상자는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7만3천명에 불과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유값 또 오른다

낙농가 하반기 29% 인상 요구

낙농가들이 우유 공급가격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하반기 중 우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낙농육우협회와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우유 등 유가공업체에 따르면 최근 낙농육우협회는 원유 공급가격인 기본유대를 현재 584원(1ℓ)에서 29%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7천300여개 낙농가 협체인 낙농육우협회는 "2006년 말부터 지금까지 사료값만 40~60% 오르는 등 제반비용 급등으로 목장경영이 한계 상황에 있다"며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원유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여의도에서 목장원유가 현실화와 경영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낙농인 끈기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유가공업체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원유가 상승하는 한편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업 리콜, 신문 공표 의무화

리콜제도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기업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신문공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리콜사항을 정부에 상세히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리콜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도 사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정부에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의 내용도 천차만별이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려 하는지를 명시하고 이행보고서에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들의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품목별로 요건과 절차 등이 달라 발생하는 리콜정보 통합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